

주간 통일정세

2015-05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윤병세 발언 비난…“남북관계 파국으로 몰아”(1/29, 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최근 핵무기 관련 발언을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망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서기국 보도에서 윤 장관의 발언이 "핵문제를 여론화해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훼손하고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파탄시켜보려는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함.
 - 조평통은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냐 대결이냐"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때에 도발적인 망언을 늘어놓는 것은 북남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흉악한 속심의 발로"라고 비난함.
 - 조평통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적 억제력'이고 실제 평화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미국의 핵무기와 한미 연합훈련이라며 "핵무기 제거를 운운하기 전에 남한에서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국가보안법, 개악 아닌 철폐돼야"(1/30, 연합뉴스)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30일 대변인 성명에서 "남조선 인민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보안법은 개악이 아니라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성명은 지난 22일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등을 통일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남조선 보수패당이 역사의 퇴물인 보안법의 칼날을 더욱 시퍼렇게 베풀고 있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이산가족 상봉 가로막는 장애물은 5·24조치"(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혈육상봉을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격분스럽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5·24 조치라고 거듭 주장함.

- "총포탄이 빗발치는 전시에 인도주의 문제가 제기되면 쌍방이 교전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흠어진 가족·친척 상봉에 관심이 있다면 5·24 조치와 북침 전쟁연습을 비롯한 근본적 장애물부터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북한 "남북관계 개선이나 파국이나...중대한 시점"(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불신과 대립, 긴장격화의 불씨'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면 남북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파국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촉구함.
- 논평은 남측이 한미 해상훈련 등 잦은 군사훈련으로 올해 시작을 '북침 전쟁연습의 총포성'으로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대화'와 '진정성'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라고 비난함.
- 논평은 이어 오는 3월 한미군사훈련 계획을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할 흥심', '군사적 대결을 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하며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 때 긴장도 완화되고 남북 간 신뢰도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대남 비난 전면 재개...내정까지 언급(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중북 논란을 비롯해 남한의 정치·사회적 문제를 비난하는 글로 5면을 가득 채우며 대남 비난 공세를 전면 재개함.
- 신문은 '겨레의 통일 염원을 짓밟는 중북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의 신은미 씨와 황선 씨 수사를 '광란적인 중북 소동'으로 규정하고, 이어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조국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공화국과 결부시켜 가혹하게 탄압하는 중북 소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함.
- 신문은 또 '친미세력이야말로 첫번째 청산 대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남조선 보수세력의 추악한 외세의존 책동"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함.

- 또 다른 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지난해 남한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들을 나열하고 "남조선 당국의 무능력과 반인민적 정책"을 문제 삼음.

■ 북한 "5·24 조치 해제 실천행동 나서라"(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대결의 빗장을 벗겨야 협력의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실천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5·24 조치의 골자는 한 명의 인원, 한 g의 물자와 한 푼의 자금도 북에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5·24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백 명의 인원이 오가는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또 신문은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관계 개선을 이룩하자면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임.

■ 북한 "한미 합동군사연습 무조건 중지하라"(1/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아직까지 외세의 민족이간책동에 놀아나는 것은 수치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기로 계획한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함.

- 통신은 그동안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비열한 수단과 방법으로 방해해왔다면서 '아직 남조선이 미국의 민족이간책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세의 청맹과니(사리분별이 없는 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남한 체제대결 책동 도발행위"...또 '징벌' 위협(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반통일적인 도전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저지 등을 거듭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벌리는 체제대결 책동은 북남관계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전쟁까지 불러오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며 '반민족적이며

- 반통일적인 도전행위는 무자비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함.
- 논평은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이 지역에 대한 '패권주의 전략'을 실현하려 한다면 이 같은 '대화분위기 파괴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함.
 - 북한은 또 남한 당국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진실로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난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초기단계 추정'(1/28, 38노스)
 -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관독한 결과 '작년 8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5개월 가동이 중단됐던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최근(작년 12월24일부터 올해 1월11일 사이)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히며 영변 핵단지에 위치한 5MW급 가스 흑연 원자로가 재가동 초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분석함.
 - 매체는 우선 작년 12월24일 ▲증기가 터빈 건물로 들어가기 직전 파이프 위의 압력밸브를 통해 나왔고 ▲소량의 녹은 물이 터빈 건물 지붕의 중앙에서 흘러나왔으며 ▲남쪽 열 교환시설 위의 원자로 지붕에서 눈이 녹아내린 장면이 확인됐고, 또 일부 뜨거운 물이 터빈 건물로부터 나오는 파이프를 통해 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이어 올해 1월1일 촬영된 위성사진은 기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으나 두 갈래의 녹은 물이 터빈건물 지붕에서 발견됐고 북쪽 열 교환기를 덮고 있는 원자로 지붕에서 눈이 녹은 것이 발견됐다고 전함.
- 북한, 해병대 백령도 훈련 비난... "징벌할 것"(1/3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0일 방송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어떤 도발과

전쟁 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징벌을 가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 방송은 또 유엔군사령부 요원의 훈련 참관을 언급하며 "미국이 침략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조선 반도에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서해·동해서 美항모 타격훈련 잇따라 진행"(2/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1일 "북한은 지난달 말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가정한 해·공군 합동 타격훈련을 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서해에서 지난달 23일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미국 항모 가정 타격훈련"이라고 밝혔으며,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된 훈련은 모두 북한 김정은이 참관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지난주 말 동해 훈련은 원산 앞바다의 한 섬을 미국 항공모함으로 가정해 이 섬을 향해 수중 어뢰를 쏘고 미그기를 동원해 항공폭탄을 투하했다"면서 "인근 레이더기지도 모두 훈련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가능 시행세칙 신설(1/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6일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해 9월 2일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신설해 우리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세칙에는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수용불가 입장을 같은 달에 북측에 구두로 통보한 뒤 11월에 다시 문서로 통보했다"고 전함.
- 이 당국자는 북측이 신설한 세칙에는 '기업이 남측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함.
- 그러나 그는 "시행세칙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이 스스로 만든 일종의

규칙에 불과하다"며 "시행세칙도 남북이 합의해야 제정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북측은 지금까지 17개의 시행세칙을 우리 측에 통보했지만 이 중 우리가 동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규정 시행세칙' 하나뿐"이라고 덧붙였다고 뉴스는 전함.

- 단절된 남북 철도·도로, 남한 구간부터 잇는다(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의 하나로 발표한 남북 SOC 연결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한 구간의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전함.
 -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나중에 올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남쪽에서 남방한계선까지 기본적인 조사나 설계를 할 것"이라 밝혔다고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람사르협약 회의 때 北에 DMZ평화공원 설명 추진(1/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6일 보도를 통해 정부 당국자가 '6~30일(현지시간) 스위스 글랑에서 열리는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 통일부와 환경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DMZ 생태평화공원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을 전함.
- 광복70주년 맞아 북한에서 남북종교인평화대회 열린다(1/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6일 보도를 통해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인 김광준 신부(대한성공회)가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평화대회 개최를 두고 북한의 5대 종단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회와 사전 교감이 된 상태"라면서 "2~3월 실무회의를 통해 일정과 장소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뉴스는 이어 남북종교인평화대회는 8~9월 중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금강산이나 평양을 고려 중이나 평양이 유력하며, 평화대회에는 7대 종단 수장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가 있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도 북남관계도 개선할 수 없다'며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1.26,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국전선」 중앙위 대변인 성명(1.30)】 우리 법무부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관련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용납 못할 범죄적 망동'이라며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 보안법은 개악이 아니라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1.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해병대의 해상사격훈련(1.27, 백령도)에 대해 '북침광란 소동'이라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1.30, 중앙방송·중앙통신)
-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며 '통일영원을 짓밟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도전행위는 무자비한 징벌로 다스려 나갈 것'이라고 위협(1.30,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北 인권문제는 모두 왜곡·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조사통보'를 발표하고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편승하여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앞장서는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 죄악은 처절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1.30, 중앙통신)
- 우리 여론조사기관의 대통령 지지율(29.7%)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지지율 하락은 반통일 정책과 반인민적 악정을 일삼아온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1.30, 중앙통신)
- 北,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북 인권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고 새해 벽두부터 분주당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2.1, 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인권공세 맞서 보고서 발표...“모두 날조”(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이하 협회)는 남한과 미국이 함께 벌이는 반북인권공세의 진상을 밝히려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에 대한 조사통보'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협회는 보고서에서 남한의 정부와 보수세력이 '북인권문제'를 조작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했으며, 북한 사회의 인권 실상을 남한 국민이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함.

- 협회는 "남조선의 '인권유린왕초'들이 (북한의) 참담고 신성한 인권을 걸고 드는 것은 과렴치하고 주제넘은 짓"이라며 "미국의 정책에 편승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 죄악은 대가를 치를 짓"이라고 위협함.

■ 북한, 인권결의 철회 재촉구... "거짓증언 밝힐것"(1/31,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3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은 보고서의 근거로 이용된 증언자료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신동혁이 인정한 조건에서 그에 기초하여 조작된 대조선 인권결의라는 것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유엔이 "인간 추물들의 거짓증언에 놀아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각국의 주권적 평등, 국제적 성공을 보장하여 신뢰를 받아야 할 국제기구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되었다"고 비난함.
- 담화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이 악랄해질수록 우리의 초강경 대응전도 더욱 강도 높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북인권사무소 설치니 뭐니 하고 설쳐대는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온갖 인권 잡귀신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임.

■ 북한 "성김 평양 방문 제안했으나 미국이 대화 거부"(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김성(성김)이 이번 아시아 방문 기간 우리와 만날 의향을 표시한 데 대해 평양에 오라고 초청까지 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마치도 우리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대화와 접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김성이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대화를 시작하자면 우리가 먼저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상대방을 먼저 무장해제시켜놓고 보겠다는 것으로서 본질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함.
- 이어 "우리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한사코

제거하려는 상대와는 마주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미국이 대조선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우리의 제도붕괴를 꾀하는 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미국 흑인·실업문제 비난... "인권유린 왕초"(1/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인권유린 왕초의 범죄적 정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마이애미 경찰이 흑인 범죄자들의 사진을 표적지로 삼아 사격연습을 해 논란이 된 사건 등을 소개하며 미국을 '인권유린 왕초'라고 원색 비난함.
 - 또 신문은 '절망속에 사는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미국인들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사진 4장을 싣고 '실업과 빈궁, 물가상승 등은 대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썩우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불안과 공포를 몰아오는 주범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이슬람 세력의 프랑스 주간지 테러 사건으로 유럽이 '테러 공포'에 빠졌다면 이같은 위기는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탓이라고 비난함.
- 북한, 신동혁 거짓 증언 또 비난... "인권결의 무효"(1/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에서 "보고서 작성시 증언자로 나섰던 신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미국 '인권 소동'의 허황성과 반동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함.
 - 통신은 이어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이름과 과거 경력을 거론하며 "미국이 이들을 내세워 모략 문서를 만든 것은 비열하고 너절한 행위"라고 비난함.
 - 통신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신 씨 등의 거짓말에 기초해 '인권 결의'를 날조한 것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 또 촉구(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시대착오적인 남조선강점 정책을 끝장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군철수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과 우리 주변대국들 사이에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이미 수립된 조건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명분이 더는 없게 되었다"고 지적함.
- 또 미군의 남한 주둔이 미군철수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골자로 한 제30차 유엔총회 결의에도 어긋난다면서 "해묵은 남조선 강점 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라"고 미국에 촉구함.

■ 북한, 소니 해킹혐의 또 부인... "해커제국은 미국"(1/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또다시 드러난 해커제국의 정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NYT의 보도를 자세히 전하며 "해커제국 미국의 더러운 정체를 다시 한 번 만천하에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함.
-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공공연히 감행하는 사이버 범죄행위를 동맹국들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최첨단 과학기술 성과를 세계제패를 위한 전쟁무기로 도용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소송 비난…“저열한 망동”(1/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근 일본에서 제기된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소송은 '일본의 수치'라며 "어지러운 과거와 결별하지 않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함.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망언 등을 거론하며 "어떻게 해서나 더러운 침략 역사와 반인륜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악을 쓰는 도덕적 패륜아의 집합체가 바로 일본"이라고 원색 비난함.
 - 이어 역사 왜곡은 일본 당국의 지지와 비호를 통해 '전면왜곡·전면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인부터 교육계,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과거 범죄를 한사코 부정하는 것이 일본의 저열한 도덕적 실상"이라고 강조함.

사. 대러시아

- "모스크바-평양 협력관계 강화…협업체 구성"(1/28, 러시아의소리)
 -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28일 러시아와 북한이 올해부터 수도 모스크바와 평양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일리야 쿠즈민 모스크바 대외경제 및 국제관계 부국장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강성호 공사참사는 최근 만나 모스크바와 평양 간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두 도시가 올해 하반기 문화, 과학, 스포츠 분야 협력을 위한 협업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북한은 오는 8월15일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에 모스크바시 대표를 초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또 방송은 강 공사참사가 올해 북한 예술작품 전시회를 모스크바에서 여는 것을 제안했으며 쿠즈민 부국장이 지지의 뜻을 밝혔다고 덧붙임.

- "모스크바-평양 협력관계 강화...협약체 구성"(1/28, 인테르팍스통신)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28일(현지시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 계획 확인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보도가 나간 뒤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에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의 승전 기념행사 참석을 확인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북한, 유럽 인권공세 비난...“도적이 매드는 격”(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남을 시비할 처지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만민평등을 제창하는 유럽에서는 온갖 차별행위로 사람들의 평등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유엔과 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을 인용해 스페인의 아동빈곤 문제나 독일의 외국인 이주민 증오살인 사건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유럽에서 의식주, 평등, 노동 등 전반적인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유럽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사법당국이 인권유린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들고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주장함.
- 북한-베트남, 수교 65주년 맞아 우호협력 확인(1/31, 연합뉴스)
 - 북한과 베트남이 31일 수교 65주년을 맞아 최고 지도부가 상호 축하 메시지를 교환하고 차관급 정책 대화를 개최하는 등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쑹 서기장 등은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양국의 당정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양국민은 물론 역내외 세계평화와 안정, 협력, 발전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베트남 언론이 전함.

- 하노이를 방문 중인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당 밉 코이 베트남 외무차관과 제4차 정책 대화를 열어 상호 관계증진을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함.
- 또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와 한반도 상황 등 역내외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어 황 쯙 하이 베트남 부총리를 예방하고 환담함

- 기밀 해제된 일본 외교문서 내용(美, 1962년 北에 대항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화학무기 배치)을 거론하며 '이것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생화학전 만행을 공화국에서 다시금 저지르려는 극악한 야망의 발로'라고 비난(1.26,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외무상), 1월 26일 주북 아세안 국가(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대사들과 담화(1.26,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韓美 연합사단' 참모부 본격 가동(1.15) 관련 '새 전쟁도발을 주도하기 위한 전쟁참모부, 전쟁부대'라며 '신성한 정치체제를 어찌보려는 정치군사적 테러기구'라고 주장 및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침략자·도발자'라고 對美 비난(1.27, 중앙통신)
-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관련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반공화국 핵소동으로 가로막아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라며 '핵전쟁책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1.27, 평양방송)
- 일본에서 '미국의 핵반입 허용 외교문서('70.9)'가 공개된 데 대해 '일본이 <비핵 3원칙> 을 내흔든 것은 위장평화술책'이라며 '일본의 핵무장화야망 위험성' 경종 (1.28, 중앙통신·노동신문)
-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관계자의 美 출판사(맥그로힐)에 '美 고등학교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수정 요구 대해 '후안무치한 자들의 어리석은 망동'이라며 '일본의 침략역사 미화분식 비난 및 과거청산' 촉구(1.28, 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국회의원·교수·언론인 등 일본인 8,749명이 아사히 신문(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실었다가 취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본의 저열한 도덕적 실상이며 수치'라며 '어지러운 과거와 결별하지 않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1.30, 중앙통신)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참관 속 도하훈련...“미국·베라에 분노”(1/2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 도하공격연습을 조직지도하셨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번 훈련이 김 黨 제1비서의 직접적인 기획과 지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훈련 일시와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번 훈련에는 황병서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했다고 전함.
 - 통신은 훈련의 목적을 "기계화타격집단들이 전진 과정에 맞다드는 모든 강·하천들을 신속히 도하할 수 있는 전투조직과 지휘 및 실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김 黨 제1비서가 "오늘과 같은 계절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해야 한다"며 "무서운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적들이 최전연 전방 우리의 눈앞에서 줄망스럽게 놀아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임.
 - 노동신문은 27일 황 총정치국장과 현 인민무력부장이 장갑차에 탄 모습, 군인과 장갑차들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모습, 포탄공격으로 치솟는 물기둥, 김 黨 제1비서가 망원경을 앞에 두고 도하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 등을 1면과 2면에 공개함.
- 김정은 "주민생활 향상이 최우선"...축산업 발전 독려(1/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이 주민생활 향상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며 식량난 해결을 위한 축산업 발전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통신은 30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지난 28일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그 전문을 공개함.
 - 김 黨 제1비서는 논문에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것"이라며 "인민생활을 높이려면 농사를 잘하는 것과 함께 축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그는 강원도 세포군 일대의 대규모 축산단지인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이 북한 축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이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내밀어야 할 사업"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수만 정보의 풀판을 조성하고 대규모 축산기지를 건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함.
- 북한 김정은, 구두공장 시찰... "매봉산 표 소문나게" (1/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리모델링을 마친 원산구두공장을 시찰하고 품질 향상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의 사출작업반, 압피직장, 제화직장 등을 둘러보고 "질 제고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매봉산' 상표를 단 공장제품이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지시함.
 - 그는 원산구두공장 개건은 전국의 모든 경공업 공장들을 이 공장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것 이라면서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의 일꾼들을 참관시켜 당이 바라는 현대화가 어떤 것인가를 실물로 보게 하자"고 제안함.
 - 이번 시찰에는 한광상 당 부장이 수행함.
 - 김정은,공해군 훈련 시찰... "미국과 마주앉지 않아" (1/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붕괴'를 언급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며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 수 있고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강조함.
 - 이날 훈련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영철 경찰총국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이 수행했고 현지에서 최영호 공군 사령관, 손철주 공군 정치위원, 리용주 군 부총참모장, 허영춘 해군 정치위원, 진철수 해군 동해함대장이 영접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새 베네수엘라 대사에 리승길 임명(1/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공화국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리승길 동지가 임명됐다"고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대표단 동남아 순방길 올라(1/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보도를 통해 리길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29일 동남아시아 순방 길에 올랐다고 전함.
 - 통신은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했다며 방문 예정지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열거하였으나 대표단의 동남아 순방 목적과 구체적인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인민제일주의' 부각...바닥민심 잡기(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당 간부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인민중시 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이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강도적인 제재압박책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인민자신의 힘"이라고 강조함.

- 또한 간부들이 "인민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고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면서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피를 바쳐서라도 인민들의 요구와 각오를 제때에 풀어주겠다는 각오를 가지라"고 주문함.

■ 북한, 무력 시위 속 주민 '통일 기대' 부각(1/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8일 '분단 70년, 열린 마음으로 새 역사를 쓰자'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2015년의 통일담론, 평양사람들의 정세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었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평양 시민들의 기대감을 전함.
- 또 매체는 최성익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참사와의 인터뷰를 싣고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는 그의 주장을 전함.
- 이어 그는 지난 2000년 자신이 실무자로 참여한 6·15공동선언에 대해 "우리 민족끼리 만나면 반드시 상대를 이해하고 성과를 창출해내는 법"이라며 "6·15때처럼 북과 남이 흥금을 열고 대화를 하여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고 덧붙임.

■ 북한, 기층조직 '당세포' 역할 강조...민심 잡기(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2면 전체를 당세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하고 같은 면 논설에서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서 당세포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임무는 매우 무겁다"고 강조하며 민심 잡기에 집중함.
- 신문은 "당이 군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으면 대중적 기반을 잃게 되고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다할 수 없으며 나중에는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당세포가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함.
- 신문은 1면 사설에서도 당세포의 역할 및 전투력 강화를 주문하며 "당원들과 일꾼들이 자기 뼈를 깎고 피를 바쳐서라도" 당정책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당세포가 밑거름이 되라고 요구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26일 故 김정숙(항일혁명투사) 빈소에 화환 전달 (1.27, 중앙방송)
- 남림혁명사적관 창립 20돌 기념보고회, 1월 26일 김춘섭(자강도 당책/기념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27,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31일 北-베트남 외교관계설정 65주년을 즈음하여 '응웬 푸 쩡'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에게 축전(1.31,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지방경제 살리기' 주력...동력은 분권화(2/1, 연합뉴스)
 - 싱가포르 대북 교류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는 1일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이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가 보도함.
 - 아브라미안 이사는 "북한 전역에 경제개발구가 건설되면서 서로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북한 관료들 머리 속에 자리잡았다"며 "북한 당국은 지역공무원들이 경제개발구 계획을 더 상세하게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 경제개발구 관련 법에는 지방공무원이나 기업소 등 개별 경제주체를 경제발전의 중심에 두는 방식(Bottom-up)의 조향이 있다"며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과학자 봉급 인상...노동자·농민 생활도 개선(1/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평양발 기사에서 "2013년부터는 (북한의) 비생산 부문에서 먼저 과학자들의 생활비를 올리는 국가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지난 2년간 기업의 자율성 강화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노동자의 생활수준도 높아졌으며 "지방의 공장들에서도 생산자들에게 종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생활비를 보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함.
- 또 협동농장에서는 가족 영농에 가까운 '포전담당책임제'의 시행으로 생산 열의가 높아져 농민에게 돌아가는 생산물이 늘었다고 덧붙임.
- 북한, '발명가 띄우기...경제적 실리 크다'(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최근 '2014년 최우수 발명가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를 2회에 걸쳐 내보내며 발명총국이 선정한 우수 발명가 10명과 그들의 발명품을 소개함.
 - 지난달 30일에는 '최우수 발명가와 농장작업반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안남도 순천시 협동농장의 증산 사례를 소개하며 최우수 발명가의 공을 부각시킴.
 - 우수 발명에는 김책공업종합대 분석기구연구소 소장 리준기가 발명한 식료공업·축산업에 활용되는 근적외선 스펙트럼 분석기, 군관 김태옥이 고안한 효율적인 소금 생산방법이 꼽힘.
 - 또 김일성종합대 연구사 마성수의 콩을 활용한 건강식품 제조법과 옥류관 부원 순정삼의 석회칼륨을 이용한 복합비료 생산법도 우수 발명에 선정됨.

다. 경제 상황

- 북한, 지난해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 사상 최대(1/30, 연합뉴스)
 - 30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셀룰러망이나 다른 무선망을 활용하는 전화기'는 모두 8천284만3천 달러(약 906억 원) 어치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는 2013년 수입액인 4천402만9천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해당 항목의 통계치가 잡히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뉴스는 전함.
 - 노트북을 포함하는 '10kg 이하 무게의 휴대용 자동정보처리 기기'의 작년 수입액도 2천336만9천 달러로, 2013년보다 16% 증가(1998년 이후 최대치)했으며, 이를 지난해 북중 무역에서 북한의 전체 수입액이 3% 감소했지만 IT 기기의 수입액은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뉴스는 설명함.

- 한편,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인구는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240만 명을 넘어섰다고 뉴스는 덧붙임.
- 북한, 쌀·옥수수 460만t 생산…올해 식량 부족(1/31, 미국의소리)
 - 북한이 지난해 쌀과 옥수수를 총 461만t 생산해 올해 식량 부족에 직면할 전망이다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전함.
 - FAO는 북한이 지난해 쌀 226만t, 옥수수 235만t을 합쳐 총 461만t의 식량을 생산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년의 290만t보다 5.9%(29만t)이 감소한 양임.
 - 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개한 '2013 북한 작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수확 전까지 도정 전 기준으로 쌀 290만t과 옥수수 200만t을 생산함.
 - FAO는 북한의 연간 최소 곡물수요량(도정 후 기준)이 540만t이라며 지난해 곡물생산 감소에 따라 올해 식량 부족분이 79만t에 이를 것으로 내다봄.

라. 대외 경제관계

- "유엔, 북한에 9년간 1천68억원 지원"(1/2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유엔이 지난해 북한 내 국제기구 네 곳에 총 650만 달러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을 배부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9년간 북한주민 지원사업에 모두 9천890만 달러(약 1천68억원)를 썼다고 보도함.
 - 북한이 이렇게 9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유엔이 2006년 이후 국제 인도주의 사업에 쓴 13억4천만 달러의 7.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북한은 또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와 함께 193개 유엔 회원국 중 9년 연속으로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을 받은 나라가 됐다고 방송은 전함.
- 유니세프, 올해 대북지원 예산 195억원…10%↓(1/2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올해 북한 지원 예산으로 1천800만 달러(약 195억 원)를 책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유니세프의 북한 지원

예산 2천만 달러보다는 10% 감소한 금액이라고 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방송은 또 유니세프가 지난해 대북 제재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1월 중순을 기준으로 작년 전체 예산 2천만 달러 중 630만 달러(32%)만 집행됐다고 밝혔음을 전함.

■ “북한, 주요국들과의 무역 규모 감소세”(1/30, 자유아시아방송)

- 2014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인도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거래한 무역 규모가 감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각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북한과 인도 간 무역 규모는 1억9천900만 달러로 전년(4억 6천2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RFA는 전함.
- 또 작년 한 해 북한과 활발한 경제협력 움직임을 보였던 러시아도 작년 9월 기준 무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으며, 중국 역시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전년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작년 북한과 태국 간 무역 규모는 1억2천633만 달러를 기록해 주요 무역국 중 유일하게 전년(1억 1천368만 달러)보다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북한과 무역 규모가 큰 국가들로 2013년 기준 중국·러시아·인도·태국 순으로 교역량이 많았다고 RFA는 전함.

- 자강도 경공업공장들의 소비자품 생산성과 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석탄 생산성과 선전(1.26, 중앙방송)
- 전국 지질부문 과학기술발표회(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 1.26~27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진행 (1.27,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에볼라 방역 이유로 8월 태권도 국제대회 취소(1/28, 미국의소리)

- 북한이 에볼라 방역을 이유로 오는 8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취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김승환 사무총장은 오는 8월24로 예정된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가 평양에서 불가리아 플로브디브로 변경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북한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기존 방침보다 오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는 또 북한이 오는 4월 1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태권도 창설 60주년 기념식 행사도 같은 이유로 포기해 다른 개최지를 모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방송은 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北 인권유린 여전…감시 강화로 탈북자 줄어”(1/29, 연합뉴스)
 - 북한에서 수감자에 대한 고문이 일상화돼 있는 등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며 국경 감시 강화로 탈북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HRW는 이날 북한을 포함한 90여개국의 2014년도 인권 상황을 분석한 연례보고서 '월드 리포트 2015'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전함.
 - HRW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감시 강화도 계속돼 탈북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중국 국경 인접지 순찰을 늘리고 뇌물을 받고 월경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들을 단속하는 한편 울타리를 치거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 탈북이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함.
 - HRW는 "북중 국경지대 단속 강화의 결과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북한 주민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킹 특사 "북 정보통제에 균열...K팝에 친숙해져"(1/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6일 미국 국무부가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21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위원장 엘레나 발렌시아노)에서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에서 유통되는 200만 대의 휴대전화 대부분이 국제전화가 되지 않는 국내용인 것을 비롯해 정보통제가 심하지만, 최근 일부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킹 특사는 미국의 한 공공기관 자료를 인용, "북한에서 여전히 주파수가 맞춰지는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탈북자와 난민 등 외부 세계로 나온 북한 주민의 약 35%가 외국 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면서 "특히 북한 주민의 약 85%가 외국, 특히 한국으로부터 입수한 DVD 등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밝힘.

마. 사회 동향

- 추억의 오락실 게임 'DDR' 평양에도 등장(1/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능라인민유원지 정보기술교류사의 기술자들이 지난해 자체의 기술로 발운동오락기재를 개발·제작했다"고 보도함.
 - 이어 신문은 "온몸운동과 율동을 게임화한 이 기재를 젊은 시민들, 특히 대학생 청년들이 좋아한다"고 전함.

- 北 김혜경 선수, '제15차 아시아 마라톤선수권대회'와 '2015년 홍콩 마라톤 경기대회'에서 우승(1.26,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 … 미·일 "남북대화 노력 지지" (01/28, 연합뉴스)
 -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8일 일본 도쿄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 모여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가짐.
 - 회의에서 3국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막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되 핵 문제에 관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6자 회담 재개를 모색하기로 함.
 - 황 본부장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압박하고 핵 문제 등 주요 사안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두 가지 트랙 전략(투 트랙 어프로치)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남북 대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성김 美6자회담 대표 "러시아도 북한 비핵화 입장 확고" (01/29, 연합뉴스)
 -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특별대표는 2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에 관한 질문에 "러시아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함.
 - 그는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봤다"면서 중요한 것은 ▲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확고한 입장이며 ▲ 러시아가 9.19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실제로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함.
 - 김 대표는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물면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비롯한 중국 관리들과 회동할 예정임.

- 서면 美차관 "北에 관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 (01/29, 연합뉴스)
 - 웬디 서면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관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first priority)"라고 밝힘.
 - 또한 서면 차관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만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비핵화가 우선 과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함.
 - 아울러 서면 차관은 "한국과 미국은 매우 강력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동맹"이며 "양측은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을 해결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오바마모디, 북핵 우려 표시·비핵화 조치 요구 (01/2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5일(인도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우려한다"고 밝힘.
 -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하고 2005년 6자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등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두 정상은 이밖에 국방 기본 협정 갱신, 해상안보 협력 강화, 세계적 테러 대응,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무역·투자 협력 등에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 미국, 김정은 방러 보도에 "비핵화가 핵심목표" (01/2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오는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비핵화가 핵심목표"라고 밝힘.
 - 국무부 대변인실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러시아 정부에

물어보기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의 국제안보 위협에 설득과 압박을 통해 대처하도록 러시아를 비롯한 동맹 및 우방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 국무부는 특히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경제교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를 보고 있지만 비핵화라는 핵심목표에 대한 우리의 대오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함.

■ 북한 "성김 평양 방문 제안했으나 미국이 대화 거부" (02/01,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최근 제의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고 공개하고 북미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함.
- 한편 성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의했으나 자신이 방중 기간 동안 북측과 접촉하지 못했다며 대화 무산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렸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북·중 무역 여전히 정상" ... 원유공급 감축설 부인 (01/27,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지난해 대북 원유 수출량이 '제로(0)'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은 계속해서 정상적인 무역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북·중 간에 원유교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 악화를 뜻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중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관계기관에 문의하라"면서 이같이 말함.
-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하는 북·중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원유(분류코드 HS 2709)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0'을 기록했으며 12월 대북 원유수출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시 '0'을 기록했을 것으로 관측됨.

- 중국, 작년 북한에 항공유 1만 3천여t 수출 (01/31, 연합뉴스)
 - 1월 31일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2014년 북중무역 통계자료(1~12월)에 따르면 작년 중국은 북한에 항공등유 1만 3천630여t(1천402만 달러)을 수출했으며 특히 항공유 수출량의 대부분인 1만 3천92t(1천348만 달러)이 3월에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이 특정시점에 대량의 항공유를 공급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2월 잠시 활기를 띤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핵실험 여파로 급격히 줄었던 중국의 대북 항공유 수출량이 작년에 증가세를 보였지만 예년보다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징의 일부 관측통은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여전히 항공유 등의 '기름'을 핵 포기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함.

라. 일·북 관계

- 북한,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소송 비난 ... "저열한 망동" (01/30,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된 증거가 없다며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범죄를 부정하는 '저열한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이 소송은 '일본의 수치'이며 '어지러운 과거와 결별하지 않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함.
 - 이어 역사 왜곡은 일본 당국의 지지와 비호를 통해 '전면왜곡·전면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인부터 교육계,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과거 범죄를 한사코 부정하는 것이 일본의 저열한 도덕적 실상"이라고 강조함.

마. 러·북 관계

- 러 크렘린궁, 북한 김정은 승전기념행사 참석 거둬 확인 (01/29, 연합뉴스)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28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러시아 외무부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은 김정은의 방러가 러·북 양국의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고, 북한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모르굴로프 차관은 러시아는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자 오랜 파트너로서 "지난해에도 5만 톤의 밀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국제민방위기구를 통해 50대의 소방차도 제공했지만 올해에는 북한으로부터 인도주의 지원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함.
- "러시아 기업, 북한 나선특구 송전 타당성 조사" (01/30,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21일자를 인용해 러시아 극동 지역 전력업체 '라오 에스 보스토크'가 북한 나선특구에 대한 전력 공급 사업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함.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러시아 측은 북한을 거쳐 남한에도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나진항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중단철도 연결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 기업들이 자원 채굴, 농업, 인프라 현대화 등의 분야와 관련한 북한 내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은 참가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남북한 사이의 신뢰와 상호이해의 강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 기타

- 北 인권유린 여전 ... 감시 강화로 탈북자 줄어 <HRW> (01/29, 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한 90여 개국의 2014년도 인권 상황을 분석한 연례보고서 "월드 리포트 2015"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전함.
 - 특히 HRW는 북한에서 수감자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주기적으로 고문을 받으며 고문 방법도 구타나 장시간 세워두기, 잠 안재우기, 성폭행 등으로 다양하다고 전함.

- 또한 HRW는 북한 당국이 중국 국경 인접지 순찰을 늘리고 뇌물을 받고 월경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들을 단속하는 한편 울타리를 치거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 탈북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함.
- “북한, 주요국들과의 무역 규모 감소세”<RFA> (01/30,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인도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거래한 무역 규모가 감소했다고 보도함.
 - 각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북한과 인도 간 무역 규모는 1억 9천900만 달러로 전년(4억 6천2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또 작년 한 해 북한과 활발한 경제협력 움직임을 보였던 러시아도 작년 9월 기준 무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으며,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역시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전년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리퍼트 美대사 “남북대화 속도·범위에 우려 없어” (01/27,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27일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대화의 속도나 범위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그는 “한국이나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런 조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붙이는 쪽”이라면서 “목표 자체가 남북대화의 재개라면 우리가 보기에 한국은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북한 쪽에서 조건이나 여건을 붙이는 것 같다”고 지적함.
 -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 “지금까지 6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있었고 우리 역할은 이런 대화를 계속 격려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대화로 한국 국민과 정부가 만족할 만한 결론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양국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함.

- 서셔먼 美차관 "北에 관한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 (01/29, 연합뉴스)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9일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 "우리는 한국과 같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비핵화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관한 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first priority)"라고 밝힘.
 - 셔먼 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최근 언급한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는지 대북관여 정책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매우 일관되다"면서 이같이 말함.
 - 아울러 그는 "한국과 미국은 매우 강력한 양자 관계가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동맹"이며 "양측은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을 해결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함.

- 한·미 '북한 사이버도발' 공동 대응 본격화 (01/29, 연합뉴스)
 -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음. 한국과 미국은 한두 달 내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국방 사이버 정책 실무협의회의(CCWG)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번 회의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사이버 도발 문제를 놓고 양국이 머리를 맞대는 계기여서 어떤 방향과 내용의 후속 대응이 나올지 주목됨.
 -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가상 공격 시나리오를 토대로 양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능력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짐.

- 美차관 "北영변 원자로 재가동, 기존상황의 지속" (01/30, 연합뉴스)
 - 로즈 고테필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은 30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군축·비확산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영변 원자로가 최근 재가동 초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연구소 분석과 관련, "이는 단지 존재해 왔던 상황의 지속이라는 게 우리의 정보"라고 밝힘.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8일 상업용 위성사진 판독 결과 지난해 8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가동이 중단된 북한의 영변 핵단지에 위치한 5MW급 가스 흑연 원자로에서 최근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공개함.
- 고테필러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우리 측과 북핵·이란 핵 문제, 사이버 안보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했으며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하나의 트랙(one track)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 한·중, 29일 '해양 경계획정 협상' 준비 협의 (01/28, 연합뉴스)
 -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한·중 양국은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 해양 경계획정 협상 준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힘.
 -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공식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이번 협의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해양 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며 협상 대표의 급(級)과 앞으로 협상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지만 첫 준비 협의인 만큼 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
- 최경환, 중국에 한·중 FTA 조속한 발효 제의 (01/29, 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왕양 부총리(경제 담당)와의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최 부총리는 "양국간 내수시장 진출 강화를 통한 안정적 교역·투자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원-위안화 자본거래 활성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과 중국내 중한경협단지 공동 개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 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투자협력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 방송물 공동제작협정 체결, 식·의약품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 국내 쌓인 위안화 中현지 대출 제안 … “中은 부정적” (01/29, 연합뉴스)
 - 국내에 쌓여있는 위안화를 중국의 현지 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한국이 제안했지만 중국이 완곡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함.
 -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24일 중국 왕양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산둥성이나 동북 3성에 경제특구를 설립, 한국의 은행들이 국내의 위안화를 경제특구에 가져가 현지 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안을 왕 부총리에게 제안함.
 -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이 '한국에게 자본시장을 개방하면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완곡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함.

- 한·중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공동연구하기로 (01/29, 연합뉴스)
 - 한·중 양국이 새만금에 조성될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29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쉬사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주임이 합의함.
 - 회의에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AMR)을 공동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양국의 관련 부처가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기로 함.
 - 이날 양국 기업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협력방안을 논의한 '한·중 경제기술교류 회의'에서도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경협단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관심과 지지를 요청함.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일정 구체 조율 (01/30, 연합뉴스)
 -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로 중·일 간 외교갈등이 촉발된 이후 매년 열리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가 재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3국 외교장관회

의 개최에 대해 3국간 기본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일본에서 총선이 있었고 연초에는 3국 외교장관 모두 외교일정이 분망해 개최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못했지만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에 대해 협의 중이며, 합의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함.

다. 한·일 관계

- 정부 "아베 담화, 과거사 상처 치유 진정성 담아야" (01/26,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힘.
 - 정부 당국자는 이날 "종전 50주년 무라야마 담화, 종전 60주년 고이즈미 담화 등 역대 일본 내각 담화에 쓰인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이 당국자는 "종전 70주년 계기에 발표하고자 한다는 아베 총리의 담화도 일본 정부가 그간 누차에 걸쳐 공언해 왔듯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한다면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일본인 8천700명,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소송제기 (01/26,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8천700여 명이 아사히신문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엔(약 9만1천500원)의 위자료와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26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소송을 낸 이들 가운데는 연구자, 언론인,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국제 사회에 널리 퍼져 일본인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함.

- 이들은 또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아사히 신문이 뒤늦게 취소한 고 요시다 세이지 씨 관련 기사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렸다'는 주장 등을 소장에 담음.
- 아베 "한·일 정상회담 전제조건 없이 이뤄져야" (01/29,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한·일 정상회담은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고 정상끼리도 솔직히 대화해야 한다"면서 "(양국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는 많다"고 말함.
 - 그는 "한·중·일 외무장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의장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관계국의 노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 한일지사회의의 7년 만에 도쿄에서 열려 (01/30, 연합뉴스)
 - 한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일본전국지사회는 30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도도부현(都道府縣)회관에서 제5회 한일 지사회의를 열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지방 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함.
 - 양측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문화 등 많은 면에서 깊은 유대를 가진 이웃국가"라며 양측은 경제, 관광, 문화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 정부가 의미 있는 교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더 심화하자고 뜻을 모음.
 - 한편 이시중 충북지사와 야마다 교토지사는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측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고, 역사 인식 문제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 전문가들 "올해 한일관계 개선 비관적" ... CSIS 설문 (01/30, 연합뉴스)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9일(현지시간), '올해 아시아·태평양 전망' 세미나에서 관계 전문가와 학자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설문조사에서 75명이 한·일 관계가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CSIS 한국석좌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현재 한·일 관계는 이보다 더 악화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많은 요소와 변수들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차 교수는 특히 "과거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은 여론이 극적으로 바뀌어 한국 전체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것은 큰 도전"이라고 지적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중국 "미국, 홍콩 문제 등 중국 핵심이익 존중해야" (01/29, 연합뉴스)
 -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PLA) 부총참모장은 1월 27일 베이징을 방문한 마이클 비커스 미국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을 만나 "대만, 홍콩, 동중국해, 남중국해, 사이버보안 등 문제에 있어 미국 측이 진정으로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함.
 - 쑨 부총참모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중국 언론과 홍콩 당국자들이 홍콩 정치에 외세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SCMP에 "쑨 부총참모장의 발언은 중국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으며, 홍콩 도심 점거 시위에 미국이 개입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함.
- 중국, 미국에 "남중국해 긴장 총동질 말라" 비판 (01/30,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자위대의 남중국해에서의 초계비행을 환영한다는 로버트 토머스 미국 제7함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긴장 조성을 총동질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함.
 - 또한 화 대변인은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는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정세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원하는 동시에 이를 수호할 능력도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0일 사설에서 "일본이 미국의 초대에 응해 남중국해로 진입한다면 이것은 중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자 중국을 공개적으로 '가상의 적'으로 삼는 의미"라면서 '중국의 반격조치는 전례 없이 단호할 것'이라고 경고함.

바. 미·일 관계

- 미 정부, 일본인 인질과 요르단 테러범 교환 반대 (01/27,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요르단에 갇힌 테러범과 일본인 인질을 교환하자는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힘.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몸값을 주는 것과 같다"며 둘 다 테러범에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사키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본과 외교적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힘.
- 美해군사령관 "미국, 일본의 남중국해 초계비행 환영" (01/29, 연합뉴스)
 - 미국이 남중국해상에서 전력 확대를 피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의 해당 지역 초계비행을 환영할 것이라고 로버트 토머스 미국 제7함대 사령관이 밝힘.
 - 토머스 사령관은 2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의 동맹국이나 동반자, 우호국들은 지역 안정을 위해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해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의 어선과 해양경비대나 해군은 이웃 국가들을 압도한다"며 "향후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임.

- “블링큰 美국무부 장관, 2월 한·중·일 방문할듯” (01/3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31일 토니 블링큰 신임 미국 국무부 부(副) 장관이 2월 후반에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며, 한국과 중국도 방문할 전망이다고 보도함.
 - 또한 교도통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까운 블링큰 부장관이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지로 아시아를 택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함.

사. 미·러 관계

- 미·EU,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러시아 추가제재 검토 (01/26, 연합뉴스)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새해 들어 재개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의 대대적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검토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힘.
 - 인도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고 말함.
 -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EU 28개국 외무장관이 오는 29일 긴급 회동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힘.
- 러 "美, 스파이 광풍에 군불" ... 간첩사건 놓고 정면충돌 (01/28,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스파이 광풍(spy mania)'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측의 러시아 간첩 체포 주장에 대해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도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함.
 - 알렉산더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러시아 외교 대표들에게 미국 안보기관이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며 은행가인 예브게니 브라코프가 간첩이라는 미국 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즉각 그를 석방할 것을 요구함.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시리아 사태를 겪으면서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미·러 관계가 또 한번 흔들릴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오바마, 러시아 승전 기념행사 참석 여부 미정" (01/30, 연합뉴스)
 - 쟈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5월은 가까운 듯 보이지만 조만간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미국 정부 인사들의 러시아 승전 기념행사 참석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함.
 -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 나치 독일을 무찌르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제1위원장 등 22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확인해왔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 정상들의 모스크바 승전 기념행사 참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케리 미 국무, 방러 계획했다가 취소"<미 언론> (01/31, 연합뉴스)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비공식 러시아 방문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함.
 - 쟈 사키 대변인은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이 다음 달 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같은 달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뮌헨을 방문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케리 장관의) 방문 일정에 추가로 발표할 사항은 없다"고 못 박음.
 - 한편 사키 대변인은 "케리 장관은 뮌헨에서 여러 번의 양자 혹은 다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면담도 그 중 하나"라고 덧붙임.

아. 중·일 관계

- 중국, 아베 담화에 과거사 반성 포함 촉구 (01/26,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패전일에 즈음해 발표할 담화내용을 예의주시하면서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함.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일본 정부와 지도자가 과거의 침략 역사에 대해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인지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함.

- 화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기존의 태도와 약속을 준수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면서 실제 행동을 통해 일본이 ▲ 평화와 발전의 길을 걷고 ▲ 역사발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고 ▲ 지역과 세계평화·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2차대전 승리 70주년 열병식, 일본 겨냥" <인민일보> (01/27,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7일, 웨이신(微信·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푸정화(傅政華) 베이징시 공안국장 겸 공안부 부부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중국 당국이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확인함.
- 인민일보는 이번 열병식은 중국 국경절(10월 1일)이 아닌 때에 이뤄지는 첫 열병식으로 대외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를 등에 업고 중국에 갈수록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본에 겁을 줘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대내적으로는 중국 군사력과 군인의 풍모를 과시함으로써 인민들의 신뢰감을 응축하고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부패분자들에게는 "해방군의 칼자루는 당과 인민의 수중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전함.

■ 중·일 '해상공중 연락메커니즘' 조속히 가동키로 (01/29, 연합뉴스)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놓고 갈등 중인 중국과 일본이 최근 국방당국 간 접촉에서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해상공중 연락메커니즘'을 조속히 가동키로 합의함.
- 양위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순 도쿄에서 열린 양국의 '해상공중 연락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협상' 결과를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이번 협상에서 4가지 컨센서스를 달성했다"고 밝힘.
- 또 양국은 이 메커니즘의 명칭을 중국의 제안대로 '해상연락 메커니즘'에서 '해상공중 연락메커니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는 앞으로 양측이 해상뿐 아니라 공중 안전문제에서도 교류협상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임.

자. 중·러 관계

- 중국-러시아-인도, 2월 베이징서 3국 외교장관 회담 (01/28,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2월 2일 러시아와 인도의 외교장관을 초청해 베이징에서 제13차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화 대변인은 "중국, 러시아, 인도는 신흥시장 국가로 많은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같거나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국제·지역 문제 및 3국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중국은 라브로프 장관에게도 왕이 부장과의 양자회담 외에 중국 지도부와의 별도 회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유럽 인권공세 비난...“도적이 매드는 격”(연합뉴스, 1.26)
 -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남을 시비할 처지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럽 국가들의 인권공세에 맞서 유럽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주장했음.
 - 신문은 유엔과 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을 인용해 스페인의 아동빈곤 문제나 독일의 외국인 이주민 증오살인 사건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유럽에서 의식주, 평등, 노동 등 전반적인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유럽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사법당국이 인권유린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들고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주장함.

- 북한, 미국 흑인·실업문제 비난...“인권유린 왕초”(연합뉴스, 1.27)
 -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6면을 미국의 흑인인권 문제와 실업난, 반테러 명목의 "패권주의" 등을 주제로 한 논평들로 채우며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북 "인권 공세"를 희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 신문은 "인권유린 왕초의 범죄적 정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마이애미 경찰이 흑인 범죄자들의 사진을 표적지로 삼아 사격연습을 해 논란이 된 사건 등을 소개하며 미국을 "인권유린 왕초"라고 원색비난함.
 - 신문은 "절망 속에 사는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노숙자로 보이는 미국인들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사진 4장을 싣고 "실업과 빈궁, 물가상승 등은 대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썩우고 있다"고 주장했음.
 - 또 "불안과 공포를 몰아오는 주범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슬람 세력의 프랑스 주간지 테러 사건으로 유럽이 "테러 공포"에 빠졌다면 이 같은 위기는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탓이라고 비난했음.
 - 이 같은 주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공세와 대북제재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다방면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됨.

- "북한 민주주의 수준, 2014년에도 세계 최하위"(미국의 소리, 1.27)
 -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2014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으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또 다시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함.
 -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7번 실시된 이 조사에서 줄곧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음.
 - EIU는 선거과정과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에 그쳤음.
 - 이 같은 점수는 세계 평균 5.5점은 물론 아시아 평균 3.65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임.
 - 부문별로 보면, 선거과정과 시민자유 부문에서 각각 0점을 받았습니다. 또 정치문화 1.25점, 정치참여 1.67점, 정부 기능은 2.5점에 그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지목됐음

- 북한, 신동혁 거짓 증언 또 비난... "인권결의 무효"(연합뉴스, 1.29)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에서탈북자 신동혁 씨가 증언을 번복한 만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북한인권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 통신은 이어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이름과 과거 경력을 거론하며 "미국이 이들을 내세워 모략 문서를 만든 것은 비열하고 너절한 행위"라고 비난했음
 - 또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신 씨 등의 거짓말에 기초해 "인권 결의"를 날조한 것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프리덤 하우스 '북한, 세계 최악 중 최악 국가'(미국의 소리, 1.29)
 -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8일 발표한 '2015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12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음.
 - 북한은 올해도 전세계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가장 열악한 나라로 지목됐으나,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과 장마당 활동의 증가 등 아주 작은 진전도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점수인 7점을 받았음
- 아치 푸딩턴 조사 담당 부회장은 북한에서는 지난 3~4년 간 아주 미미한 진전이 이뤄졌는데, 예를 들어 일부 주민들이 한국이나 중국을 통해 들어온 DVD와 테이프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잘 알게 되었음
- 푸딩턴 부회장은 또 북한에서 소규모로 장마당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작은 진전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북한 당국이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음.

■ "北 인권유린 여전...감시 강화로 탈북자 줄어"< HRW>(연합뉴스, 1.29)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90여개 국의 2014년도 인권 상황을 분석한 연례보고서 "월드 리포트 2015"를 29일(현지시간) 발표하고, 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전했음.
- HRW는 북한에서 수감자에 대한 고문이 일상화돼 있는 등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며 수감자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주기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사형의 경우 "반국가 범죄"나 "반국민 범죄" 등 모호하게 정의된 행위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사기나 밀수 등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당국 판단 하에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음.
- 또한 북한 당국의 감시 강화도 계속돼 탈북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음.

■ 북한,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소송 비난...“저열한 망동”(연합뉴스, 1.30)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된 증거가 없다"며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범죄를 부정하는 "저열한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 논평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망언 등을 거론하며 "어떻게 해서나 더러운 침략 역사와 반인륜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악을 쓰는 도덕적 폐륜아의 집합체가 바로 일본"이라고 원색 비난했음.
- 역사 왜곡은 일본 당국의 지지와 비호를 통해 "전면왜곡·전면부정"으로

이러지고 있다며 "정치인부터 교육계,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과거 범죄를 한사코 부정하는 것이 일본의 저열한 도덕적 실상"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의원·언론인·연구자 등 일본인 7천700여명은 지난 2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적인 기사를 실었다가 취소한 아사히(朝日) 신문을 상대로 위자료와 사죄 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음.

■ 북한, 인권공세 맞서 보고서 발표…"모두 날조"(연합뉴스, 1.30)

-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이하 협회)는 남한과 미국이 함께 벌이는 반북인권공세의 진상을 밝히려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에 대한 조사통보"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음.
- 협회는 증언을 일부 번복한 신동혁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관련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인권 문제 제기를 "해괴한 광대극", "서푼짜리 모략극"으로 평가했음.
- 그러면서 남한의 보수세력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북한인권결의안을 날조해 국제적 이슈로 만드는 데 발벗고 나섰다 주장했음.

■ 북한, 인권결의 철회 재촉구…"거짓증언 밝힐것"(연합뉴스, 1.31)

- 북한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3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탈북자 신동혁 씨가 거짓증언을 실토한 만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유엔 인권결의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음.
- 담화는 유엔이 "인간 추물들의 거짓증언에 놀아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각국의 주권적 평등, 국제적 성공을 보장하여 신뢰를 받아야 할 국제기구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되었다"고 비난했음.
- 이어 유엔이 체면을 살리려면 인권결의를 즉시 철회하고 중앙정보국의 고문 등 미국과 한국의 인권실태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담화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 "이제 와서 신동혁이 '수많은 증인 중 한 사람'이라며 증언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놀아대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2. 북한 인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김정은 겨냥한 국제적 압박 계속돼야"(코나스넷, 1.26)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일본 방문을 마치면서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국제적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와 김정은의 암살작전을 그린 코미디 영화 "인터뷰" 등을 언급하며 전체주의 체제의 지도부에 대한 조명과 조롱은 그 같은 체제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이며, 김정은에 대한 조롱이 북한으로 스며든다면 북한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또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도 북한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일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북한과 일본 간 대화의 진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북-일 간 대화는 환영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대화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힘.
 -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 양국 간 노력 뿐아니라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킹 특사 "북 정보통제에 균열...K팝에 친숙해져"(연합뉴스, 1.27)
 -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21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음.
 -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유통되는 200만 대의 휴대전화 대부분이 국제전화로 되지 않는 국내용인 것을 비롯해 정보통제가 심하지만, 최근들어 일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킹 특사는 당시 발언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접근 차단으로 인해 "북한 주민은 바깥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북한 내부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잘 모른다"고 지적했음.
 - 그러나 "탈북자와 난민 등 외부 세계로 나온 북한 주민의 약 35%가 외국

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는 미국의 한 공공기관 자료를 인용하며 북한 당국의 정보통제에도 일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특히 "특히 북한 주민의 약 85%가 외국, 특히 한국으로부터 입수한 DVD 등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 커비 위원장 "북한인권보고서 수정 검토 안 해"(미국의 소리, 1.27)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 오류와 관련해 최종 보고서에서 신동혁 씨의 증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는 점을 들며 COI 최종 보고서 수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전 위원장은 법원을 예로 들면서, 판결에 대한 재조사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증거에 매우 결정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 뿐이며, 신 씨의 새로운 증언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또한 COI 조사는 철저하고 주의 깊게 진행됐으며, 신 씨의 증언이 전체 결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COI는 이미 활동을 마쳤기 때문에 특정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어 북한이 신 씨의 증언 번복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COI 보고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곳은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국제형사재판소 소속 검사라고 지적했다.
- 또한 탈북자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유엔이나 언론 등이 북한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임을 강조하며 북한 당국이 자신을 초청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 '北, 정치범수용소 공개하고 수감자 생사 알려줘야'(크리스천투데이, 1.28)

- 6명의 북한정치범수용소 출신자들과 27명의 수용소 피해자 가족 모임인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를 공개하고 그곳에 수감돼 있는 협회 가족들의 행방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 협회는 최근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북한인권결의안이 무효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유엔 COI 조사대상자 한 사람의

오류를 전체 정치범수용소 존재를 덮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북한 당국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정치범수용소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 ▲현재도 수용소에 수감된 가족들의 행방과 생사 여부를 공개할 것 ▲COI 보고서에 나온 북한 반인도범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했음.

■ 캐나다 의회 청문회서 북한인권법 필요성 제기(미국의 소리, 1.30)

-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개발위원회 산하 국제인권 소위원회가 29일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했음.
-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치범수용소 등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물리적 독재와 함께 선전선동부를 이용해 주민들의 정서와 감성을 통제하는 북한 당국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현재 북한은 정권이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출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회장은 북한인권법에 탈북자 보호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 정보 유입,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북한 지도자 김정은 기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다루스만, 3월 북 인권 연례보고서 제출(자유아시아방송, 1.30)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3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공보담당은 30일 일본 납북자 조사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한 결과 등 최신 조사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일본 외무상, 납치문제 담당상, 비정부기구 대표,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 등 납북자 가족 등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했음.
- 보고관은 북일 납북자 교섭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지만 북한 정부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이 자행되는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음.

- 보고서에는 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방한 시 수집한 정보 내용도 충실히 반영될 예정임.

■ 심상정 '북한인권법 추진 안한다...새누리 안은 반대'(헤럴드경제, 21)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일 최근 이슈가 된 북한인권법 추진 논란과 관련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일부 매체가 보도한 정의당 자체 북한인권법 추진에 대해 부인했음.
-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면서도 '인권친화적인 방법과 남북관계 개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 또한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음을 밝히면서도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음.

3. 탈북자

■ 북한인권단체 "스웨덴 난민 소년 강제송환 중지해야"(연합뉴스, 1.26)

-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웨덴에 체류 중인 탈북자 주장 소년과 관련해 "스웨덴 정부는 강제 송환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체는 "소년의 세 번째 항소가 법원에 제출됐지만 스웨덴 이민국은 조선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분석 결과 이민국의 조사 방법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함.
- 이어 소년이 북한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입장을 담은 "탈북고아 확인서"를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 제출했음.

- 스웨덴 이민국 '소년 '탈북' 새 증거 검토'(자유아시아방송, 1.26)
 -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벵슨(Frederik Bengtsson) 공보국장은 26일, 현재 스웨덴 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소년이 탈북자라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다면 입장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4. 이산가족

- 북한 "이산가족 상봉 가로막는 장애물은 5·24조치"(연합뉴스, 1.26)
 - 북한은 노동신문은 26일 "혈육상봉을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5·24 조치라고 거듭 주장했다.
 - 논평은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와 금강산관광을 방해하고 있으며, 남한이 "대화"를 말하면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려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원한다면 5·24 조치와 군사훈련을 비롯한 "근본적 장애물부터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노동신문은 같은 면에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남측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등도 소개했음.
- 정부, "북한이 제시한 전제조건 수용할 수 없다"(조선일보, 1.26)
 -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6일 오후 5·24조치 해제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대화 개최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음.
 - 임 대변인은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전제조건들은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대화가 개최되기도 전에 그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우리 정부가 들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진정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음.
 - 또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대화에 나오는 전제조건으로 삼기보다는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북한이 원하는 관심사에 관해 우리정부와 포괄적으로 협의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 새정치 "남북대화 위해 5·24 조치 해제" 촉구(뉴시스, 1.26)

-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남북 대화의 진전을 위해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음.
-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모두 대화를 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대화를 위해 실질적인 관심사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다"며 "특히 박 대통령은 통일 관련 업무보고에서 화려한 사업들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낼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남북 대화 진전을 위해 (정부는)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등 선도적으로 남북대화 재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 원혜영 의원 역시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밝히면서도 "2보 진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5·24 조치 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해제를 두고 고심할 것이 아니라 해제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략적,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 5.24조치 해제 요청 서한(연합뉴스, 1.29)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 NCCK는 서한에서 "5.24 조치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면서 "5.24 조치를 신속히 해제해 민족의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음.

■ 北, 이산상봉 전제조건 5·24조치 해제 제시...정부 일축(뉴시스, 1.29)

- 북한이 29일 이산가족 상봉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를 재차 제시했으며, 이에 정부는 북한에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

- 재발방지를 5·24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응수했음.
- 북한 노동신문은 "대결의 빗장을 벗겨야 협력의 문이 열린다"란 기사에서 "문제는 북남관계를 전면폐쇄시킨 이 5·24조치가 남조선당국이 운운하는 이산가족 상봉까지 말아먹고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음.
 - 신문은 "북남사이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5·24조치를 지속시키는 현 남조선당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문제와 관련해 응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이 인도주의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음.
 -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를 해제하려면)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이 책임 있는 조치"라고 말했음.
 - 이어 "이산가족 상봉은 민족의 절박한 과제고 순전히 인도적인 사안인데 이를 5·24조치와 연계하는 북한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정부, 北의료인력 독일 연수비용 지원 7년 만에 재개(연합뉴스, 1.28)

- 통일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에 남북협력기금 9천만 원을 지원키로 최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독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독·조(獨·朝)의학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 의료인력을 독일로 초청해 선진 의료 기술과 체계를 교육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2007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음.
 - 2008년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은 7년 만인 올해 들어서 재개됐음.
- 유니세프 "올 대북 사업에 1천800만 달러 필요"(미국의 소리, 1.28)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공개한 '2015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북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의 2천만 달러와 비슷한 규모인 1천8백만 달러가 필요하며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식수, 위생, 보건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임.
 - UNICEF는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영양 사업에 가장 많은 850만 달러를 투입해 임산부와 가임여성, 수유모,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490만 명에게 미량영양 보충제(micronutrient supplementation)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영양 지원 다음으로 많은 5백만 달러가 식수와 위생 사업에 배정됐으며, 이 사업을 통해 학생 2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2백만여 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보건 사업에 3백50만 달러를 투입해 12개월 미만 영아 36만여 명과 임산부 36만 5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백43만여 명에게 1년에 두 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백6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나눠줄 계획임.
 - 이밖에 1백만 달러를 투입해 학교시설을 보수하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세계기금, 올해 대북 사업에 1천80만 달러 지원(미국의 소리, 1.29)
 -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은 올해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1천8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세계기금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동안 북한 내 190개 군을 방문해 결핵 퇴치 활동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결핵 도말 양성반응 환자 1만 5천800여 명 중 1만 4천여 명이 완치돼, 완치율이 90.5%에 이른다고 밝혔음.
 - 또한 세계기금은 북한 내 결핵 퇴치 지원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86%가 치료되고 있다고 밝혔음.
 - 세계기금은 오는 2017년까지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활동을 위해 각각 4천3백만 달러와 1천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북한이 지난 10월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음.
- 정부, 유엔인구기금 북한인구조사에 130만 달러 지원(헤럴드경제, 1.29)
 - 정부는 29일 제2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엔인구기금 북한인구조사 지원 사업을 비롯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인구조사 사업에 130만 달러(한화 14억여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 유엔인구기금 북한인구조사 사업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영유아 영양지원 등 대북지원사업을 펼칠 때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사업임.
- 캐나다, 10년간 2천600만 달러 대북 인도 지원(미국의 소리, 1.31)
 - 캐나다 외교부 산하 국제개발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의 다이애나 카다지 대변인은 지난 10년 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약 2천6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음.
 - 카다지 대변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지원은 영양 실조에 걸린 북한 주민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에 집중됐다고 말했음.
 - 캐나다는 주로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국제 적십자사 IFRC등 유엔과 국제 기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
 - 카다지 대변인은 올해 대북 지원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캐나다 정부가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예의 주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8. 북한동향

- '남당국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문제와 관련하여 온당치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5.24조치와 북침전쟁연습을 비롯한 근본장애물들부터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1.26, 중앙통신·노동신문/혈육상봉을 가로막는 근본장애물)
- 이산가족 상봉문제 관련 '현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에 추종되어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5.24조치로 인위적인 장벽을 더 높이 쌓아왔다'며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제도적 장벽이 5.24조치'라고 주장(1.27, 평양방송/흩어진 가족·친척상봉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美 마이애미 경찰, 흑인 범죄자들 사진을 표적으로 한 사격연습 관련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걸고드는 미국이야 말로 인종적 모순이 폭발상태에 이른 인산생지옥, 인간증오사상과 무차별적인 살육만이 횡행하는 인권말살시대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비난(1.27,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유린 왕초의 범죄적 정체)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